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9년 3월30일(월)
통권33호(제2권 제11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

경제공동체로 진일보 하는 중국과 대만

마야흐로 양안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만 상위 500대 제조업의 약 70%가 중국에 진출했다는 통계에서도 드러나듯 양안의 경제협력은 양과 질 모두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양안의 협력관계는 특히 작년 11월 3일 장관급으로는 최초로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친원린(陳雲林) 회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안은 12월 15일, 2001년부터 시작된 통항, 통상, 통신의 부분적·제한적 교류인 소3통을 전면화한 대3통 시대를 개막했다. 또한 12월 21일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침체로 곤경에 처한 본토 진출 대만기업을 위해 3년에 걸쳐 13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5조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대만 기업의 본토 공공건설 투자와 신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함과 아울러 본토 진출 대만 기업에게 본토의 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모두 10개항의 경제협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칭된 전국정협 주석은 이 자리에서 “대만이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중국은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1회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추진된 양안간 경제협력은 이 같은 충분한 양적 축적 과정을 거쳐 이제 새로운 질적 비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양안이 거론하고 있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 체결이다. 사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같은 맥락인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양안이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1년 전이다.

작년 4월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처음으로 양안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제기한 것에 대해 중국은 12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비공식적으로나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에 다시 대만의 마잉주 총통은 올해 4월 양안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이르면 올 봄부터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도 2009년 3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 개막식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양안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추진 의사를 발표했을 뿐 아니라 13일 전인대회 폐막식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25일에도 판리칭(范麗青)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양안 평화 발전과 양안 주민 안녕에 도움이 된다면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안간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여타 국가와 체결하는 FTA와 비교할 수 없는 의미가 있다. 본질적으로 FTA는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 철폐라는 상호 이해를 통해 체결 국가 사이의 경제적 결합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분단 상황의 양안이 FTA의 일종인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양안의 경제적 결합도를 제고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공동체와 경제 통합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9년 3월 20일 발표한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만 인력의 본토 취업 열기가 뜨겁고,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한다. 본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나 실제 구직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본토에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금융업, 전자정보 관련업 등의 비중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양안간 구직과 실제 취업 추이를 경제협력협정과 연결해 본다면 향후 양안간 경제공동체 구성과 경제통합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를 추론할 수 있다.

현재 본토로 구직하려는 주요 업종은 대만이 본토보다 먼저 시작하여 노하우 등을 축적했으면서도 점차 그 비중이 본토로 집중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즉, 대만에서는 산업 비중 축소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본토에서는 산업 비중 확대로 양질의 인력 확충이 시급한 업종들이다. 따라서 대만 인력의 본토 진출 러시는 양안간 인력 수급 불균형 상태의 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양안의 산업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체계로 재배치되는, 다시 말해 단일 경제 체계 혹은 경제 공동체 구축의 출발로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예전의 양안간 경제협력도 현재의 남북경협과 유사하게 본토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단순임가공만이 아닌 IT, 금융 등 첨단산업과 요식업과 소매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안간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협력협정까지 체결된다면 양안의 경제 결합도가 얼마나 긴밀해질 것인가는 불을 보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등에서 본토 종속을 이유로 경제협력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지만 대세화된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 경제협력에서만은 이제 양안의 현재는 남북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양안은 경제공동체로 성큼 성큼 내딛고 있는데, 남북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제33호 목 차

이주의 칼럼

나쁜 북한을 혼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2

이주의 주요 기사

[정책진단] 남북협력기금 지원 정부 입맛대로? 3

'폐쇄국' 북한, 휴대폰 사용자 급속 증가 '눈길' 4

"北미사일에 과잉대응해선 안돼" <자누지> 5

개성공단 기업 '3중고' 6

北, 로켓발사 안보리 제재시 6자회담 불참 위협 7

中, 대만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8

대북(對北)문제 한국이 주도 안하면 미국,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 9

日전문가 "미사일 파괴명령은 정치쇼" 10

China unruffled over North Korean launch 11

ピストルの弾同士、難しい」鴻池氏、迎撃困難の認識 12

추천논문 /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진출 방안 13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13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 **늦봄 문익환 목사 15주기 추모 심포지엄**
▶주제: 늦봄 방북 20년, 통일운동의 성찰과 전망 외

▶일시 : 2009년 03월 31일(화) 14:00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세미나**

▶주제: 북한의 권력이동과 인권문제

▶일시 : 2009년 04월 02일(목) 14:00

▶장소 : 프레스센터

이 주의 칼럼

나쁜 북한을 혼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김영운(남북물류포럼 회장)

지난 3월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9회 북한 인권회의에서 「신동혁」을 만났다. 그런데 그가 한 말 중 내 가슴에 꽂힌 말이 있다. 그가 뉴욕에 갔을 때, 그 곳에 온 북한의 유엔관리자 자기를 보고 오히려 더 두려워했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당당히 북한을 탈출했다는 말을 하면서 그곳의 실상과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자기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순간 나에게는 강철처럼 굳은 신념으로 다가온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지난 날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한 일이 비록 눈에 보이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들에게 오히려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제 곧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모종의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 성질 뻔쳐하는 일에 속수무책으로만 당할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대북 정책과 북한 관리에 있어 정부의 무능력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최선의 조치는 무엇이겠는가? PSI에 전면 참가하고, 북한 선박의 제주항로를 봉쇄하고, 대북한 인도적 지원을 폐지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항구적으로 문 닫게 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북한에게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스스로 잃을 것, 빼앗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인공위성이라고 우기는 미사일을 쏘지 못하게 하려면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는 수밖에 없다. 체제가 보장되지 않고, 경제적인 실익을 얻지 못하는 한, 그들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관계에서 확실한 것이 있다. 우선 비핵·개방·3000의 남한 정책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북한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그들의 개방은 체제 안전이 담보된 훨씬 뒤에나 가능하다. 그것도 그들이 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일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또 다른 확실한 것도 있다. 개성공단은 남쪽 기업이 북한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의 긴장은 종국적으로 우리의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언제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는가? 하고 반문한다. 북한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어찌 북한만의 문제인가? 아니 뎌 굴뚝에서 어떻게 연기가 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유엔에서 북한 관리가 「신동혁」씨를 오히려 더 두려워한 것은 그들 스스로 그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같은 인식을 더 빠르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북녘 땅에 흘러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일이다.

대화와 소통을 북과 이루어내기엔 남북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걱정이다. 이제와 남한 정부가 보다 더 진지한 대화를 북한과 하려고 해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허망하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허망하긴 마찬가지다. 그동안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남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의미가 없는 공허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는가?

그 동안 한 것이 고작 이것 때문이었냐고.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olof.org/data/data04.php?code=h2b_column&mode=view&uid=19.00&page=1&pnt=1&f=&q=&g=&c=&l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진단] 남북협력기금 지원 정부 입맛대로?

-- 3월 23일 서울신문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기금 집행에 대한 평가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민간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이뤄진 기금 집행 평가는 주로 회계 측면에 집중됐는데, 앞으로는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당 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 심사때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및 이행 여부를 기금 지원에 공식적으로 연계한 것은 처음이다.

평가는 크게 계획 단계의 타당성(30점), 집행 과정의 효율성(20점), 결과의 유효성(50점) 측면에서 이뤄진다. 지원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계획단계 타당성 항목에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에 부합하는가’, ‘핵문제, 인도적 문제(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해결에 기여하는가’,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는가’ 등의 지표로 돼 있다.

남북경협민간 단체들은 이러한 평가에 반발하고 있다. 남북경협 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평가모델을 통해 투명하게 기금관리를 하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대북지원단체들의 지적처럼 정부가 평가 항목에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 단체들의 자율성과 단체별 지원 특성을 살려 남북협력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개성 가동업체 100개 돌파..고민도 산적

-- 3월 23일 연합뉴스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개성공단 내 가동기업 수는 101개로, 작년 12월말(93개)에 비해 8개가 늘었다.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가동업체 수가 늘어난 것이 개성공단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희소식’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속 사정은 좀 다르다고 공단 관계자들은 말한다.

올들어 새롭게 가동에 들어간 8개 업체는 공장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산활동을 시작한 회사들이며, 분양받은 업체 중 신규로 공장을 짓는 업체는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작년 말 이후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업체들은 입주를 미루거나 상황에 따라 일정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입주

를 포기하면 되지만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33개 업체의 입장이 가장 애매한 상황이다.

사업 전망이 이처럼 불투명하지만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들로서는 투입한 건설비용과 이미 받아놓은 주문량 등을 감안할때 받을 빠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들은 통행도 통행이지만 근로자 공급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속히 정상화돼 근로자 숙소 건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스캇 브루스 美노틸러스研 소장 “北 전기분야 열악”

-- 3월 23일 서울신문

북한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자는 아이디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국제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노틸러스연구소는 지난 1998년 북한 평안남도 온천군 운하리에 5기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한 바 있다.

→북한에 풍력 발전소를 지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북·미간의 신뢰구축조치(CBM)로 기획된 시범사업이었다. 존스재단, 록펠러재단 등 민간 재단에서 재정지원을 했다. 당시 프로젝트는 비정부기구(NGO)가 북한에 식량이 아닌 에너지를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였다. 풍력발전기 용량은 11kW로 50가구의 주민 2300명 가운데 절반이 하루 12시간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됐다.

→신재생에너지가 북한에 어떤 유용함을 주는가.

-우선 북한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다. 석유와 달리 태양광이나 풍력은 북한도 갖고 있다. 석탄처럼 고갈되거나 환경문제를 유발하지도 않는다. 이와 함께 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북한 전국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필요한 마을마다 소규모 발전소를 설치해 학교와 병원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북한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경수로를 원하지 않는가.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 경수로를 짓는다고 해도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수로 발전소에서 전기가 필요한 지역으로 송·배전 시설이 연결돼야 하는데 북한은 그런 시설이 없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에너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수로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한다면 북한이 받아들일까.

-북한에 경수로는 김일성 전 주석의 유언 때문에 함목 적성을 갖고 있어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끝까지 경수로를 요구한다면 북핵 협상은 결국 파

국을 맞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로 못지않게 '하이 테크'라는 사실을 갖고 설득해봐야 할 것이다.

외교부 “PSI 전면참여 검토 중”

-- 3월 27일 헤럴드경제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3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PSI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일부 참여만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 대량살상무기의 밀수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저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제협력체제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를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조림사업·탄소배출권 확보 협의 등 北녹색성장 길 터

-- 3월 23일 서울신문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이 북한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과 북한에 대규모 조림사업을 벌이고 이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화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문제를 협의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남북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한국측이 단독으로 북한에서 사업을 제안하기는 어려우므로 UNEP와 협력한다는 것이다. 예산은 우리측이 부담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며, 사업은 UNEP가 추진하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 등도 북한에서의 조림 사업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검토해보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한 바 있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6자회담에서 합의했던 대북 중유 제공량 100만t 가운데 일부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한·미 양국에서 북한에 신·재생에너지의 제공을 검토

하는 것은 정치적·기술적으로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북한의 송·배전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북한은 생산된 전기를 전국에 배분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수십 MW나 수 MW 단위로 필요한 지역에 나눠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송·배전 시설망이 필요없는 것이다.

'폐쇄국' 북한, 휴대폰 사용자 급속 증가 '눈길'

-- 3월 23일 세계일보

북한의 휴대폰 사용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22일 LA타임스는 북한의 야채행상과 구멍가게가 핸드폰 판매점으로 변신하고 있다며 휴대폰이 평양에서 주목받는 전자기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월부터 평양에서 ‘고려링크’라는 이름으로 휴대폰 사업을 시작한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 커뮤니케이션의 발표에 따르면 3개월 만에 북한의 휴대폰 판매량은 6500대를 넘어섰다. 업체는 최빈국이며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 북한에서의 사업이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문은 2007년 국민총생산이 1150달러인 북한에서 300달러에 달하는 휴대폰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과 같은 고가의 아이템이라며 대부분의 고객은 정부 관리거나 해외에서 송금을 받는 부유한 특권계층이라고 전했다. 휴대폰의 한 달 통화요금은 일반 시민의 한 달 월급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판매량 증가와 관련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제 관리를 위한 측면이 크다”는 해석을 내놨다.

北신문, 30여년 역사 3革命' 재강조

-- 3월 23일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북한의 최장기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춰 "보다 높은 단계"로 심화시켜 나갈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1975년 11월 노동당 중앙위 제5기 11차 전원회의에서 결의된 것을 기념해 매년 11월이면 이 운동의 심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날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말 제기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에 맞춰 "지금이야말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 운동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뒤 그가 추진해온 운동으로, 30여년이 흐르

면서 기념일 정도에나 강조되는 수준으로 시들해졌으나 노동신문이 이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와 결부시킴으로써 새롭게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조부 김형직이 "모든 반일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워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위력한 지도적 혁명조직"이었다고 북한이 선전하는 '조선국민회의'를 1917년 3월23일 결성한 기념일과 관련, 북한 매체들은 잇따라 "만경대 가문의 애국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23일 '음악과 기사' 프로그램에서 김형직이 지었다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들려주며 "만경대 가문의 애국의 녀이 어린 신념의 노래"라고 주장하고 "이 위대한 애국의 혈통으로 주체의 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 노래는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위업, 세계 자주화 위업을 기어이 실현해 갈 만경대 가문의 신념과 의지, 우리 인민의 불타는 마음을 담아 싣고 영원히 울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北미사일에 과잉대응해선 안돼"〈자누지〉

-- 3월 24일 연합뉴스

북한의 로켓 발사 예정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 시 이에 대해 미국이 과잉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프랭크 자누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전문위원에 의해 23일 제기됐다.

오바마 대선캠프에서 한반도 팀장을 지낸 자누지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2009 아시아 의회 시각'이라는 세미나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미사일 요격이나 발사대에서 미사일 제거, 6자회담 중단 및 폐기 등과 같은 과잉대응을 하면 안 된다"며 북미 미사일 협상 재개 등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이 클린턴 전 행정부 말기에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노리고 있을 수 있고 북한은 당시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 대가로 10억달러를 매년 받고 미사일 프로그램까지 6자회담에 포함시키길 원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자누지는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거나 수출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는다면 이를 요격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계속 배치하거나 알래스카에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북 제재정책은 거의 다 실패했다며 제재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핵 제조를 못 하게 하는 등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는 게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자누지는 대북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 당사국들의 일치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북한 '위성발사' 중지하지 않는다"

-- 3월 24일 뉴시스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는데 대해 한-미-일의 중단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사정에 정통한 중국 관계자들 사이에는 "발사 중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베이징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에 얽매일 수 밖에 없는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들었다.

먼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에 핵군축 협상을 압박하려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성공시켜야 한다.

다른 이유는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려는 속셈이 있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타국에 있는 과학기술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는 과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인공위성에 높은 관심을 기울였다.

여기에 더해 4월9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3기 지도체제가 출범하는 사정도 감안돼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위성은 최고인민회의 개막 직전에 쏘아올려질 예정으로 사실상 김 국방위원장 지배체제의 강화를 겨냥한 국위발양 수단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북한은 내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일본, 北 '위성' 각의결정 없이 파괴명령 방침

-- 3월 24일 뉴시스

일본 정부는 내달 4~8일 발사한다고 통고한 북한의 '인공위성' 문제와 관련해 미사일 등이 자국 영토와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 파괴조치 명령을 각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발령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자위대법에 의거한 첫 파괴조치 명령을 이같이 내리기로 방침을 굳혔다.

자위대법 82조 2조2항에 따라 사태 급변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이 미리 기한을 정해 비공표로 요격을 명령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금주 안에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 하마다 방

위상의 3각료회담을 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유럽 보험사 "북한 체류 위험, 생명보험 안돼"

-- 3월 24일 노컷뉴스

유럽의 보험 회사가 수년째 북한에 살면서 사업을 해 온 유럽 국가 출신의 사업가에게 위험한 국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해약을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스위스 출신으로 북한과 공동으로 투자해 지난 2004년부터 '평스제약합영회사'를 운영하는 펠릭스 압트 회장이 최근 자신이 가입한 유럽의 생명보험 회사로 부터 갑자기 해약 통지를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압트 회장의 측근은 "보험회사 외에 유럽의 신용카드 회사도 북한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압트 회장의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압트 회장이 직접 보낸 전자 우편에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알려왔다" 면서 "어느 보험회사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북한에 있는 많은 유럽 기업인이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다른 사람도 보험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북한 투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압트 회장은 "전 세계 200여개 나라 3천 6백만 명의 기업인이 가입해 기업 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LinkedIn은 지난 18일,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의 사용자 협약에 근거한 제재에 따라 북한과 이란, 쿠바, 수단 등에서 미국의 정보를 제공받는 고객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 중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유럽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에 대한 인식이 더 악화되면서 이런 결정들이 나온 것 같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설명했다.

美 "北기자역류 외교적 해결 노력"

-- 3월 24일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3일 북한의 미국인 여기자 2명 억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문제가 양국 외교당국에 의해 해결될 때까지 내버려두면 좋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조사를 진행중인 미국인 2명을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면서 "지난 금요일(20일) 밝혔던 것처럼,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여기서 적게 언급할 수 있으면 있을 수록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 정도만 언급하게 해주

면 좋겠다"고 덧붙여 미국은 북한의 미국인 여기자 억류 문제가 외교적으로 가능하면 조용하게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억류사실 통보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억류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북한이 뉴욕 채널이나 북한 대사관, 뉴욕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 등 어떤 방식으로 통보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논의를 더 진행하길 원치 않다고 밝혔다.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 기자는 지난 17일 북중 접경지대의 두만강가에서 취재 도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개성공단 기업 '3중고'

-- 3월 24일 헤럴드경제

▶글로벌 경제 위기=개성공단은 가동업체 수 100개를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8개가 늘어난 것 이외에도 33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를 대기하고 있다. 규모로 보면 일정 목표를 달성한 셈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업체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개성공단 수출액 총액은 지난해 3월 575만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후 점점 감소해 1월에는 189만달러까지 감소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2007년 동월에 비해 수출 현황이 30~40%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환율이 오르면서 북한 근로자에게 달러로 임금 지불을 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인건비도 올랐다.

▶남북관계 경색=남북경협시민연대는 24일 북한의 사전 통보없는 통행 금지로 인한 원자재 공급차질로 "출입이 불안정했던 2주 동안 기업마다 25~40%의 생산 차질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평균적인 월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전체 약 800만달러 내외의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특히 남북관계 악화와 경제 위기가 겹친 지난해 10월부터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매월 2억원에서 6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대표는 "단순한 매출액을 제외하고 예측불능으로 인한 대외 신용 추락과 납기일 미준수 등으로 인한 무형 자산 손실을 포함할 경우 피해액은 수백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도 미적=문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어디서도 보전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안전판으로 제시한 경협손실보조보험의 경우, 북한의 투자 재산 몰수·박탈·전쟁·내란 등의 위험시에만 기업 투자금의 90%를 회수할 수 있을 뿐 이번 경우에는 해당되

지는 않는다.

또한 개성공단 상황이 악화된 후부터는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 20여개 업체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北, 로켓발사 안보리 제재시 6자회담 불참 위협

-- 3월 24일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이뤄질 경우 북핵 6자회담에 불참할 뜻을 시사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인 일본이나 미국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만 차별적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 배치된다"며 "이러한 적대행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화는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며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은 일본부터 시작하여 9.19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거부한 나라들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 담화는 "6자회담이 일부 참가국들의 적대행위로 하여 끝내 깨질 처지에 놓인 오늘의 현실은 적대관계의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핵무기를 내놓을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의 진리성을 다시금 검증해 주고 있다"며 "대화로 적대관계를 해소할수 없다면 적대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힘을 더욱 다져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北, 억류 여기자 신변안전 보장"

-- 3월 25일 노컷뉴스

북한이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한 신변 안전을 보장했다고 미 국무부가 24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여기자 2명을 적절하게 대우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The North has assured us the detainees will be well-treated)"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안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우리는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된 언급을 적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드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여기자들을 억류한 뒤 간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한국의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언제쯤 이번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조만간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북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한·국제 유나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 기자등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에 대한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현재 해당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모래 반입, 16일만에 재개

-- 3월 24일 건설경제

북한모래 반입이 중단 16일 만인 24일 재개됐다. 24일 북한모래 수입업체에 따르면 지난 9일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북한모래 반입이 이날 오후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중단된 지 16일만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마찰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중단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수입업체들에 비공식적으로 자제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한·미 훈련 중에도 모래 채취에 대해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선박의 안전을 고려해 운행 자제를 요청했었다"면서 "이날부터 선박 운행을 정상화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2월 중 북한모래는 총 29만9847㎥가 반입돼 지난 1월(22만7737㎥)보다 31.6% 증가했으나 작년 같은 달(82만8455㎥)보다는 63.8%나 감소했다.

"北창광거리 식당들 통신망 연결"

-- 3월 24일 조선일보

북한이 평양 창광거리에 밀집한 음식점 18곳에 대한 개건(개조) 공사의 일환으로 이들 식당을 정보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4일 전했다.

이들 식당을 관리·운영하는 창광봉사관리국은 "모든 식당들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설비들을 갖추기로 하고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도입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개건 공사는 지난해 4월 시작돼 현재 80% 진행됐으며 식당 건물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두고 내·외부의 장식 미장, 주방의 신축과 축조, 상하수도망

공사, 거리에 잔디를 새로 심고 도로에 타일을 붙이는 작업 등을 실시했다.

창광거리에는 창광산국수집, 서양요리집, 무지개식당 등 18개 식당이 있으며, 전통요리 외에도 중국 요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제공한다.

창광봉사관리국의 류영희(45) 처장은 “이번 개건 사업을 단순히 건물이나 상수도망을 새로 고치는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며 개조공사를 음식점의 서비스와 경영 방식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요리사들은 “300여가지의 요리들을 능숙하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접대원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대외봉사도 능히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강습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北 미사일 생산-수출 않는다면 年10억달러 보상은 꽤 싼값”

-- 3월 25일 동아일보

프랭크 자누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전문위원은 23일 “북한이 미사일을 생산하거나 배치하지 않고 (관련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보상 희망금인) 매년 10억 달러라는 돈은 꽤 저렴한 가격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후보 대선캠프에서 한반도 팀장을 지내기도 했던 자누지 의원은 이날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 대가로 10억 달러의 현금 보상을 원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수출 등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요격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배치하거나 알래스카에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보다 (10억 달러를 보상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누지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므로 북-미 미사일 협상 재개 등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이 필요하다”며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미사일 요격이나 발사대에서 미사일 제거, 6자회담 중단 및 폐기 등과 같은 과잉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美구호단체, 北 추방명령 수용... 재개 방법 모색

-- 3월 25일 뉴시스

북한에서 식량 배급 활동을 펼쳐 온 미국 민간 구호단체 '머시 코'(Mercy Corps)는 24일(현지시간) 이달 말까지 자국에서 철수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그러나 지원 활동을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시 코'의 폴 마자로위츠 북한 책임자는 이날 워싱턴에 위치한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북한은 지난해 체결한 협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20일까지 현장 사무소를 폐쇄하고 31일까지 본부 폐쇄와 장비 및 직원 등 모두 철수할 것을 통보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마자로위츠 책임자는 이 같은 추방 조치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한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요구에 응하는 동시에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 또 지원 활동을 재개할 방법이 있는지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2개월에 걸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40만톤, '머시 코' 등 비정부 구호단체(NGO)를 통해 10만톤 등 모두 50만톤에 달하는 식량을 지원받기로 한 바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까지 50만톤 가운데 16만9000톤을 북한에 제공했으며, 지난 1월 전달한 5000톤 가량의 옥수수과 콩, 식물성 기름 등이 미국의 마지막 대북 식량 선적분이다.

현대아산 금강산관광 예약 3만명 돌파

-- 3월 25일 조선일보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객 모집 목표치인 3만명을 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 현재 총 3만675명이 접수했다.

현대아산은 2월13일부터 금강산 관광 예약 판매를 시작, 4월말까지 3만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1차 모집 목표는 달성했지만 예약은 계속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나서 1개월 이내 출발하면 요금의 50%를 할인해 준다.

中, 대만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 3월 25일 연합뉴스

중국은 대만이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인 종합경제협력협정(CEC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판리칭(范麗青)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양안 평화 발전과 양안 주민 안녕에 도움이 된다면 합의서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 대변인은 “중국과 대만은 아직 비공식 차원에서도 CECA 회담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양안 경제에 도움이 되는 CECA 체결을 적극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안은 범죄와의 전쟁, 금융협력, 정기 항공 노선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회담을 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과의 양안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홍콩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유사한 경험 시스템인 CECA 체결을 구상해왔다.

스위스은행, 北 투자 '오라스콤'사 지급보증

-- 3월 26일 노컷뉴스

북한의 이동통신과 평양 류경호텔 건설 등에 투자한 이집트 회사 '오라스콤'에 스위스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준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이동통신과 류경호텔 건축 사업에 참여한 이집트 회사 '오라스콤'사가 스위스의 UBS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받았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북한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는 이 소식통은 "오라스콤사가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과 류경호텔의 건설 등으로 지금까지 약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면서 "이윤을 내기 힘든 북한의 열악한 기업 환경에서 이런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는 스위스의 UBS 은행이 지급 보증을 서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오라스콤 회사의 투자로 나타나는 전시적인 효과를 위해 스위스 은행 측에 오라스콤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했고, 오라스콤사는 이윤을 낼 수 없는 투자환경에도 북한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UBS 은행의 세르게 슈타이너 공보 담당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이집트의 오라스콤 회사가 지급보증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밝힐 수 없지만, 수년 전까지 UBS 은행은 북한과 사업 교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북 소식통은 오라스콤 사는 현재 북한에 이동통신 사업과 류경호텔, 상원시멘트에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양 보통강호텔에는 30여 명의 회사 관계자들이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공장들도 상표 세련화에 관심

-- 3월 27일 연합뉴스

북한이 제품의 질 향상과 함께 새로운 상표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소개했다.

이 신문 26일자 "조선산업미술창작사가 늘어나는 상표 도안 주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 창

작사가 올해 들어 대동강맥주공장, 대흥단감자가공공장, 평양일용품공장, 평양곡산공장 등 50여 곳에서 상표 도안 주문을 받았으며, 그동안 창작한 상표 도안도 300여 점에 달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대동강맥주도 품질의 향상과 더불어 상표를 새롭게 만들 데 대한 국가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며 종전 상표는 바탕이 흰색이었지만 새 상표는 바탕을 풀색과 진한 붉은색으로 바꿔 "상품의 품위를 더욱 돋구어주었다"고 창작사 관계자는 말했다.

리병익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사장은 "요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과 병행하여 상표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상표의 창작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對北)문제 한국이 주도 안하면 미국,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

-- 3월 27일 조선일보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미 이간을 노리고 있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미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문제를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 CIA(중앙정보국)에서 25년간 근무하고 2005년 퇴임한 아서 브라운(Arthur Brown) 전 CIA 아시아 담당 책임자는 26일 일부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북한의 대포동2호 발사가 확실시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국이 미사일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미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어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만한 시간이 없다. 북한은 미국과의 단독 협상을 원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한국과 먼저 협상해라, 그 뒤에야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 독자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가?

"북한이 대포동2호를 발사한 뒤 한국의 입장이 강력하고 분명하지 않다면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모색할 것이다."

—대포동2호 발사 뒤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엘 고어 전 부통령,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 등을 대북 특사로 보낸다는 얘기도 있다.

"직책상 그리고 과거 주한 대사라는 경험상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특사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경험이 있고 본인이 김정일과 협상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나를 특사로 보내달라'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엘 고어 부통령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남북협력사업자, 방북승인기간 내 별도신고 폐지

-- 3월 27일 뉴시스

남북 직접 왕래자 중 남북 협력 사업자와 수송장비 승인을 받은 사람은 '통일부 장관에게 승인받은 방문기간' 내에 '별도의 방문 승인'을 받지 않아도 북한 왕래가 가능해진다.

통일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30일 공포된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행정절차 간소화 ▲교류협력 관리체계 보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 직접 왕래자 중 '협력사업을 하는 자'와 '수송장비 승인을 받은 자'는 방문기간내에서 별도의 방문 승인 없이 북한 왕래가 가능(안 제12조)해지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방문 승인 기간을 받더라도 방북 때마다 별도의 신고를 해야했다.

▲개성공업지구 등 특구지역 내에서 ▲총 투자금액이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 등은 협력사업 승인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바뀌고(안 제30조) 북한방문·북한주민접촉 민원 처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안 제12조 및 제18조).

교류협력관리체계 보완과 관련, 교류협력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북한방문·반출입·협력사업 등 승인시 '조건' 부가사항(결과보고서 제출 및 방문 안내교육 이수 등)을 명시(안 제12조·제18조·제26조 등)하고 당국간 합의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0조).

행정조사 절차상 ▲출석요구 ▲서류 검사 ▲사전 조사 계획서를 송부해야 한다(안 제42조).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조치로 통일부 장관이 방문승인시 부여하는 방문기간을 1년 이내로 명시했다(안 제12조). 이와관련 방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북한주민 접촉신고와 관련해 면제 대상이 없었으나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참석시 접촉 ▲당국간 합의 또

는 국제행사에 의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과의 접촉 등의 경우는 신고 면제가 된다(안 제18조).

이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31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군 "미사일 파괴명령은 정치쇼"

-- 3월 27일 연합뉴스

군사 저널리스트인 마에다 데쓰오(前田哲男)씨는 교도(共同)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 실패 등으로 사전 통고와 달리 일본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따른 요격 준비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속마음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그럼에도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지스함이나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는 등 과장된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부채질하기 쉽다"며 "'확실하게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보이려는 정치쇼적인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이번에 MD를 실전적으로 운용하려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자위대의 생각도 투영된 것 같다"며 "정부는 국민에 관련 정보를 철저히 공개하고 냉정한 대응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 히로시마(廣島)시립대 히로시마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이 우주조약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말 바뀌치기다. '군사적 위협이 있다'고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군사적 대응이 제일이라는 발상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북한은 악'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 심어주려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대북 식량·에너지지원 어려워질것"

-- 3월 28일 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면서 대북 식량·에너지 지원이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클린턴 장관은 폭스뉴스 '온 더 레코드'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 "유엔에 의한 일정한 행동들을 유발시킬 것"이라면서 "그들(북한)은 에너지와 식량 도움을 호소해 왔으나 그런 필수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여기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접촉해 우리와 협

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임을 강조하며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인공위성을 실은 미사일이나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비핵화 초기 조치를 이끌 회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나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매우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는 이를 제안했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평양에 보내겠다는 뜻도 전달했지만 그들은 그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러 "위성이면 안보리결의 무관" 美에 통보< RFA >

-- 3월 28일 연합뉴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 게 인공 위성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의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서울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러시아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북한이 쏘려는 발사체가 위성이라면 1718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최근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쏘려는 것이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발사 원리가 같아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한.미.일의 해석과 달라 향후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北매체 "민화협 관변단체화 기도" 비난

-- 3월 28일 연합뉴스

북한의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새 대표 상임의장에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가 선임된 것을 "민화협을 저들의 반통일 책동을 합리화하는 관변단체로 더욱더 전락시키고 동족 사이의 화해, 협력을 차단하려는" 기도라고 비난했다.

북측이 김 대표의장의 선임에 이 같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민화협이 북측과 진행하고 있는 각종 교류협력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매체는 남한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북한 방문과 지원협력 사업에 대해 "부당한 간섭과 훼방을 일삼는 등

협력, 교류사업마저 대결적인 대북정책의 틀에 맞추려고 음모로 양으로 책동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통일관련 정부 요직과 단체들에도 분열책동에 앞장서온 극우 보수 분자들을 체계적으로 박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덕룡 대표의장은 지난 19일 취임식을 가진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남북 당국간 대화의 숨통을 트기 위해 북측 민화협과 접촉을 시도하고 민간차원의 협력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으며, 민화협은 올해 사업계획으로 ▲북한 황폐산림의 녹화사업 지속 추진 ▲북한과의 교류사업 및 해외동포와의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정했다.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방역 성과...접경지 발병 50%이상 감소

-- 3월 28일 뉴시스

경기도와 북한이 지난해 공동 추진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성과를 냈다.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 수가 전년보다 무려 50%이상 줄었다.

평가회에서는 ▲접경지역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밀도 및 말라리아 환자 수 조사 결과 ▲도 지원물품에 대한 효과 분석 ▲올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도내에서는 지난 2007년 1007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으나 지난 해에는 51.8%나 줄어든 485명에 그쳤다. 특히 개성 인근 지역의 말라리아 환자 수도 50%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이처럼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줄어든 것은 모기 집중 발생기의 잦은 호우와 일별 최저온도 하강 등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공동 방역사업을 통한 접경지역 집중 방역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북한에 지원한 유충구제 방역제와 유문등(모기를 유인하는 등불)을 활용한 위험지역 방역 등 방역방식도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도 유충·성충 구제약품 등 방역약품 지원과 효율적인 방역을 위한 정보교류 등 공동 방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China unruffled over North Korean launch

중국은 북한의 발사 상황에 침묵을 유지하다

-- 3월 24일 Asia Time Online

출처 <http://www.atimes.com/atimes/China/KC24Ad01.html>

BEIJING - Amid signs of mount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over Pyongyang's nuclear and weapons programs, China has remained calm and seems reluctant to use strong words of criticism for its neighbor and long-time communist ally.

Beijing hosted North Korea's Premier Kim Yong-Il

last week, a visit which came in the middle of an escalating row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yongyang over its plans to launch what it claims is an experimental satellite but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aintain is a ballistic missile test.

Regional powers have warned the launch will trigger international sanctions that could lead to the collapse of the stagnant North Korean economy and further destabilize the volatile state. But Beijing has retained its poise and continues to urge Pyongyang to cooperate with efforts to resume stalled international talks on dismantling its nuclear programs...

중국은 북한의 핵과 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의 고조 속에서도, 오랜 우방이자 이웃인 북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강한 어조의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은 위성의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남한은 탄도탄 발사라고 주장하는 발사 계획으로 인한 북한과 국제 사회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주 김영일 북한 총리 김영일을 베이징에서 예방하였다.

동북아 주변 강국들은 (위성) 발사가 경제 제재를 촉발하여 침체된 북한 경제의 파국과 나아가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했으나, 중국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에게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회담에 계속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Pyongyang warns U.S. against sanctions for launch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경고하다

-- 3월 24일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출처 <http://www.iht.com/articles/2009/03/24/asia/north.php>

North Korea said Tuesday that if the United States pushed for United Nations sanctions in response to its planned rocket launch, it would quit the already stalled six-nation talks on end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North Korea said it would launch a communications satellite between April 4 and 8.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believe the launch is a cover for testing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nd have warned that they will try to punish such a move in the U.N. Security Council.

They say that for North Korea, a country that hardly has enough money to feed its own people, the costly "satellite" program is nothing but a disguise for testing its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Launching a satellite and a ballistic missile uses the same technology, they say...

북한은 지난 화요일 만약 미국이 UN을 압박하여 계획된 로켓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미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에서 탈퇴한다고 하였다.

북한은 4월 4일~8일 사이에 통신 위성을 발사한다고 하

였으나,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은 이것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발사가 강행될 시 UN 안전 보장 이사회를 통한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들 국가는 자국민을 부양할 능력조차 없는 북한이 이러한 값비싼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는 것을 위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 국가는 위성과 탄도 미사일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ピストルの弾同士、難しい」鴻池氏、迎撃困難の認識 「탄두 간 격추 어렵다」 코노이케씨, 요격 곤란 인식

-- 3월 26일 아사히신문

鴻池祥肇官房副長官は26日の参院予算委員会で、北朝鮮の「人工衛星」が日本に落下した場合に迎撃が技術的に可能かどうかについて、「私はピストルの弾がピストルの弾に当たる、ピストルの弾同士が当たるとするのは、なかなか難しいことだなあと思っている」と述べ、迎撃は困難との認識を示した。

政府筋が23日、「鉄砲をバーンと撃った時にこっちからも鉄砲でバーンと撃って(弾と弾が)当たるか。当たらないと思う」と発言したことを踏まえ、社民党の福島党首が鴻池氏に見解をたずねた。鴻池氏は当初、「関係閣僚が政府の一致した見解を持っているので、そちらに質問を」としていたが、福島氏が重ねて尋ね、自らの考えを示した。

福島氏は鴻池氏に「かつてこの発言をされたことがあるか」とも質問したが、鴻池氏は「私からお答えする立場ではない」と述べるにとどまった。

코노이케 요시타다 관방 부장관은 2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 「인공위성」이 일본에 떨어졌을 때 기술적으로 요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나는 탄두 간 요격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요격이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 측이 23일, 「미사일로 공격했을 때, 이쪽에서도 미사일을 쏘면 (탄두끼리) 맞을까?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사민당의 후쿠시마 당수가 코노이케 부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코노이케 부장관은 당초, 「관계 각료는 정부의 견해와 일치한다」라고 답했지만 후쿠시마 의원이 거듭 질문하자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후쿠시마 의원은 코노이케 부장관에게 「예전에 이러한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으나 코노이케 부장관은 「내가 대답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쳤다.

추천 논문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진출 방안

김성일(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진출은 국내의 한정된 건설 수요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내시장의 확대로 남북 상생의 토대를 형성하고, 향후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또한 경협사업을 통해 북한지역의 개발 사업을 실제 추진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초석을 다지는 의미도 있다.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진출은 북핵문제의 진전과 북한의 개혁, 개방 정도에 따라 크게 중단기와 장기의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중단기는 북한의 핵 신고와 검증이 진행되면서 북일 및 북미 수교협상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 이미 진행 중이거나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의 일부가 착수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조응하여 남북경협 분위기가 무르익고, 건설업체는 대북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검토와 조직을 형성하는 등, 사업 도출과 실행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단계에는 기반시설 등 향후 예상되는 수요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공동 및 협력 방식으로 진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직 북한 내 투자 기반의 미비, 투자보장 장치의 미흡과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의 기반 취약 등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단독 진출하거나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크므로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민간 건설업체의 진출이 가능할 것이고,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진출하기보다는 북한 내 자체 자원확보공사에 북한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부족한 북한의 투자재원에 대응하여 국내 인프라펀드 등의 조성에 기업이 일부 지분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정부 및 금융기관 기관투자자와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중단기 기반시설 건설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통 기반시설, 에너지 기반시설 등은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전면 개방, 핵문제의 완전 해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북일,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고, 신의주, 남포, 원산, 나선 등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북교역 및 투자가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진입하면 대북투자 안전조치가 정비되고, 국제기구의 양허성, 비양허성 자금 지원, 외국 민간투자펀드, 공적개발 원조자금, ADB개발자금, 북일수교에 따른 대일 청구자금 등 각종 국제자금과 지원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 전역에 걸친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BOT, BOO 등의 민간유치를 통한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베트남의 경우처럼 민관 공동파트너십의 사업 추진도 본격화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진출도 활성화되어 국내 사업에 기반한 다양한 수요개발형 사업이 추진되고, 이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한 기반시설 및 대북 투자펀드 등의 조성이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북 건설부문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기업과의 합작 및 현지법인 설립, 현지 자회사 및 현지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남북 간 건설 분야의 상호협력의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건설업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단기적으로 상호협력 가능한 분야의 타진과 향후 북한 진출에 따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북진출의 중장기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rihs.re.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北음식점도 보는 요리에 눈떠

○ 북한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전문식당인 월향각은 손님들이 자기 구미에 맞는 오리를 선택하면 접대원들이 구이를 손님들 앞에 이동하여 조리봉사를 한다"며 "오리구이로를 대중식사실에 전개하고(내놓고) 한달가량 봉사하였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좋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전했다.

北김책공대 전자도서관 이용자 매년 2배 증가

○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이 2006년 초 개관한 이래 “독자 수는 해마다 두배 이상 증가돼 하루 최고 8천여명”의 교수, 학자, 학생들이 이용하며 개관 이후 “각종 봉사를 받은 독자 수는 연 53만7천여명”이라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5일 전했다.